

신고자 보호 절차

신청인 신청서 제출

-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청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 신변보호조치 요구
- 책임감면 신청

신고자보호과 접수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신고자보호과 조사·확인

- 조사계획 수립
- 관련자 등 확인 조사
- 조사결과 보고

위원회 상정

신분보장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인사고료요구 (인사혁신처 또는 관계기관의 장)

징계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징계요구

고발

책임감면

징계,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요구

사전예방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화해

신변보호

신변보호 요구 (관할 경찰관서의 장)

청렴
세상

부패·공익 신고 및 이해충돌신고

-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comwel.or.kr)
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공익침해행위 신고
-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



청렴 · 공정 · 투명 · 인권 · 책임

多가치 CLEAN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제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비밀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88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보도 금지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책임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형·징계의 감경·면제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신변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제65조

부패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요청



신변보호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순찰 등

신분보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3조의2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평가 차별과
그에 따른
급여 차별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에
부정적인
차별 또는 조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중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
신분보장조치 신청

※ 부패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